

# 서울시 폐기물 문제의 현재와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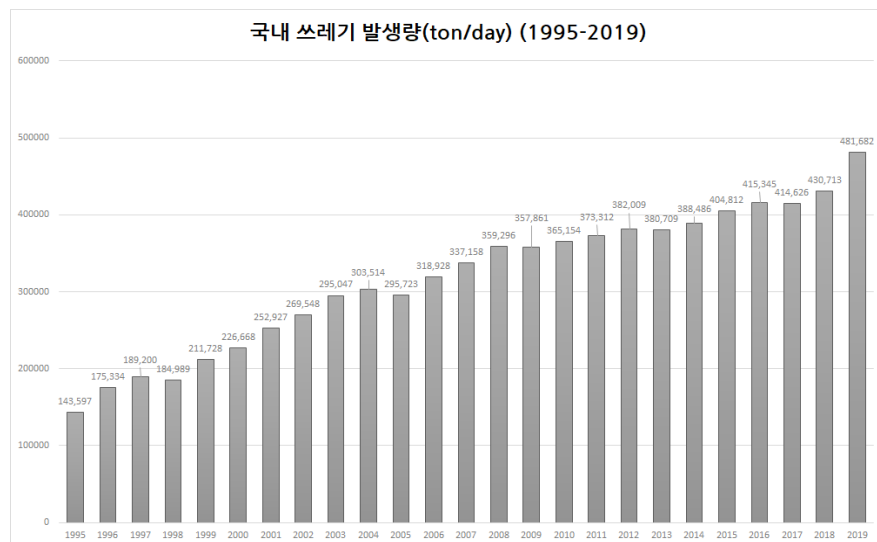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로 인해 촉발된 갈등을 중심으로-

[2019103653 김민석 2019103674 송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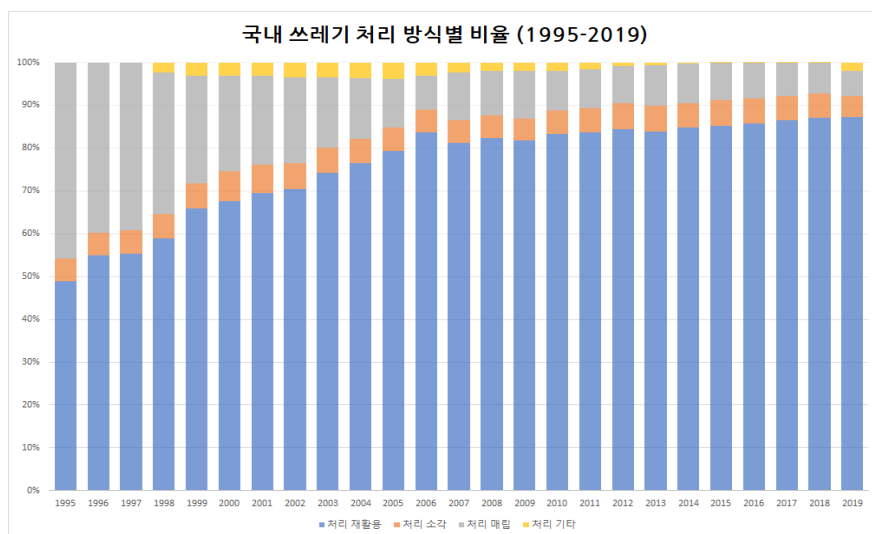
1. 서론	2
2. 문제현황	3
2.1. 폐기물 처리 시설 문제: 지역간의 갈등 (공간적 확산)	3
2.2. 폐기물 처리 시설 문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	6
3. 원인 평가	9
3.1. 갈등의 구조	9
3.2. 갈등의 원인	10
4. 지역별 해결 사례	15
4.1. 해외의 대도시 폐기물 문제 해결 사례	15
4.2. 국내 폐기물 처리 갈등 해소 사례	17
5. 결론 및 제언	19
5.1. 결론	19
5.2. 제언	19
6. 참고문헌	23

## 1. 서론

현대인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양이 증가하고 있다. 위 그래프는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서 분석한 국내 쓰레기 발생량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1995년에 일 평균 143,597톤 정도 배출되던 쓰레기는 꾸준하게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50만 톤 가까이 되는 배출량을 보인다. 폐기물에 대한 또한 COVID-19로 의료 폐기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일회용품 사용도 크게 늘어나 폐기물 처리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국내 쓰레기 발생량(톤/일), 환경부<sup>1</sup>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국내 쓰레기 처리 방식별 비율, 환경부<sup>2</sup>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sup>1</sup>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19)

<sup>2</sup>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19)

위의 그래프는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서 발표한 국내 쓰레기 처리 방식별 비율을 막대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률이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0년대 초반부터는 약 85%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기물들은 소각, 매립, 혹은 저발전 국가들로 반출(기타)을 하는 것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왔다. 전체 발생 폐기물의 약 20% 이하만이 매립과 소각을 통해 폐기되고 있지만 이것이 확실한 처리량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한국 환경공단은 2019년 전체 폐기물 중 86.5%가 재활용되고 매립은 6.1%, 소각은 5.2% 뿐이라 집계했으나 이는 재활용 선별업체에 전달되는 비율만으로 계산한 것이다. 사실상 많은 비율의 폐기물이 재활용이 안되어 매립 혹은 소각되고 있다.

폐기물은 발생 뿐만 아니라 처리 과정도 중요한 문제이다. 각 지역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입각하여 소각장, 쓰레기 매립지와 같은 쓰레기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시설은 비선호시설로 간주되며, 이해관계자간, 지역간 입장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다. 이번 지역개발의 이슈 보고서에서는 현재 뜨겁게 조명되고 있는 수도권 제3-1 매립지 종료로 촉발된 수도권 폐기물 처리시설 갈등을 지역개발론적 시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 2. 문제현황

### 2.1. 폐기물 처리 시설 문제: 지역 간의 갈등 (공간적 확산)

최근 확정된 인천시 수도권 매립지의 2025년 사용종료 선언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초래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인천과 서울시 지자체 간의 갈등이다.

인천광역시 서구와 김포시 일부지역에 걸친 수도권 매립지는 1992년 제1매립지를 시작으로 현재는 제1, 제2매립장은 사용이 종료, 제3 매립장은 운영 중에 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하는 쓰레기의 출처 비율은 서울시가 48%, 경기도가 33%, 인천광역시가 19%로, 서울시의 비율이 압도적이다.<sup>3</sup>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수도권

---

<sup>3</sup> 환경부, 생활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될까?, 환경부 블로그, 2018.10.04, 1 (<https://m.blog.naver.com/mesns/221369583055>)

3-1매립장은 다가오는 2025년을 기점으로 사용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립장이 있는 인천시는 강하게 쓰레기 독립을 선언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계부에 매립지를 운영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 왕길동에 위치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조감도<sup>4</sup>>

서울시는 인천시가 제안한 서울지하철 7호선-청라국제도시 연장선의 종점부 방향(선형)을 수도권매립지로 바꾸는 안을 백지화하고 당초 계획대로 종점부를 공항철도를 따라 ‘ㄱ’자로 꺾이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절반씩 분담하기로 한 지하철 9호선의 공항철도 직결사업 또한 기본계획 승인과 고시까지 나왔으나 서울시가 인천시가 사업비를 분담하고 운영금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섰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단순히 비선호시설 회피에 대한 문제에서 지역간 갈등으로 번져 다른 주민편의시설의 설치 사업에도 영향을 주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서울시는 인천시의 결정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서울시의 필요에 따른 이기적인 결정인 것은 아니다. 수도권매립지는 1980년대 환경부가 입지 선정을 주도하고 서울시가 대부분의 자본(~70%)을 충당하여 만들어진 곳으로, 인천시가 매립장에 대한 소유권은 가지지만, 재산권은 서울시가 가져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서울시는 신규 자원관리회수시설(~매립지)의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새로운 비선호시설의 도입을 반기는 지자체가 없어 입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sup>4</sup> 김영빈 기자,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추가 조성 승인, 미디어 인천신문, 2015.09.24, 1 (<http://www.media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11> )

일각에서는 공모 부지 220만㎡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75%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로, 애초 이 만한 규모의 부지를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최근 각 지자체가 소각장 하나 짓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서울의 경우는 사실상 이번 공모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나 다름없고, 경기도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기에 조건을 일추 맞춘 대상지를 찾는다 하더라도 후보지 반경 2km 이내 주민 동의 50% 사전 확보라는 조건도 공모 기간인 3개월 이내에 맞추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가였다. 무엇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예상 시점인 2025년까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로 부지가 마련된다고 치더라도 보상,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매립장과 부대 시설 공사 등의 공정을 5년 안에 끝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따라서,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은 결국 애초에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고, 대체 매립지 공모에 실패했으니 4자 합의 단서조항을 활용해 기존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를 추가 사용하자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지적하고 있다.<sup>5</sup>



<폐촉법 개정안 반대 시위>

<sup>5</sup> 김정문 기자, 수도권대체매립지 공모 실패, 예정됐었다, 에코타임스, 2021.04.15, 1 (<http://www.ecotig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26> )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종료로 촉발된 갈등은 수도권 안 뿐만 아니라, 그 바깥으로 뻗어나가기도 한다. 수도권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폐기물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과 해외 등으로 이동하여 처리되는데, 이는 폐기물 처리의 원칙인 지역 내 발생 폐기물 지역 내 처리를 명백히 어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을 수도권은 지키지 않고,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입지시킨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의 쓰레기를 떠맡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최근 발의된 폐촉법 개정안에서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외부 반입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당진·서산·김제 등 폐기물 집중화로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sup>6</sup>

---

## 2.2. 폐기물 처리 시설 문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

수도권 매립지 종료로 인해 파급된 갈등은 지자체 간의 수평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확장 또한 일어나게 된다. 폐기물 처리 시설 문제의 이해관계자들은 공공기관(정부), 지자체, 주민, 사업체로 구성된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지자체, 주민과 지자체 등 다양한 단위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와 관련해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갈등을 빚은 사례로, 환경부와 인천시의 사례<sup>7</sup>를 들 수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15년 4자 합의를 맺으며 당초 2016년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간을 연장했다. 이때 작성한 합의문에 대한 해석 차이가 종료 시점 논란을 낳았다. 이들 기관은 잔여 매립지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는데, 당시 추정된 3-1공구의 포화 시점은 2025년 8월이었다. 인천시는 이를 근거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주장하는 반면 환경부는 '3-1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공간적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사용 종료 시점이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2025년까지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들 간의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sup>6</sup> 명지예 기자, "산업폐기물 농촌에 묻으란 말...폐촉법 개정 철회해야", 매일경제, 2021.05.20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5/488106/>)

<sup>7</sup> 공승배 기자, 환경부 '인천시 종료 선언'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사실상 공식화, 경인일보, 2021.02.02, 1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10201010000179> )



수도권 매립지에 가장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서울시는 지역 내에 위치한 총 네 곳의 소각장이 있다. 양천·노원·강남·마포에 폐기물 소각 시설이 자리하고 있으나 양천·노원의 소각장은 20년 이상 된 노후화시설이라 장기적인 사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쓰레기 소각 비율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선언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새로운 소각장의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다.

## 서울시 산하쓰레기 소각장 위치와 공동이용 현황



<서울시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위치<sup>8)</sup>>

그러나, 어떤 지역이 선정되던 지역 주민과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는, 근본적으로 소각시설이 건설될 당시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용과 설명, 보상이 미진했고 소각시설의 건설과 운영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감소했고, 광역 단위의 쓰레기 반입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였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각장 운영이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쓰레기처리시설 입지 결정 → 주민과의 갈등 → 갈등해소를 위한 쓰레기처리시설 사용에서

<sup>8)</sup> 박은미 기자, "생태하천 바로 옆, 자원순환센터 건립? 말도 안 돼", 오마이뉴스, 2019.03.02, 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5710](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5710))

다른 구의 쓰레기 반입 금지 → 처리시설의 낮은 가동률<sup>9</sup>이라는 갈등 흐름에 따라, 쓰레기 처리 문제는 단순히 새로운 쓰레기처리 시설의 입지의 결정 이후에도 운영에 있어서 갈등은 지속되게 된다.

인천시의 경우 수도권 매립지 폐쇄 이후 사용할 새로운 매립지의 입지 선정에 나섰으나, 역시 지역 주민과의 갈등에 부딪혔다. 인천시의 차기 매립지의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영흥도는 이미 1990년대 화력발전소 입지 문제로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 지역이다. 과거 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인센티브와 환경오염에 대해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이러한 전례가 반복될까 영흥도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변의 농 어업 종사자가 많아 매립지로 인한 환경적 피해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sup>10</sup>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이 2025년까지 폐쇄된다. 이에 대장동 쓰레기 소각장의 시설 현대화가 요구되어 왔다. 특히 대장신도시 개발에 따른 소각장 증설이 불가피해지자 인천 부평·계양구와 서울 강서구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소각장 광역화를 지하화로 추진해왔다. 부천시와 인천시, 강서구는 그동안 재원분담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해오다 최근 재원분담 합의안을 도출하고 최종 협약을 체결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시가 협약식을 무기한 연기하고 뒤늦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설득에 나서기로 하면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심지어 시는 그동안 광역화 추진을 위해 인천시, 강서구와 수차례 협상을 진행해오면서도 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밀실행정으로 일관해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sup>11</sup>

---

<sup>9</sup> 김은미, 2013, 비선호시설 가동률을 둘러싼 갈등에 관한 연구, 공공 인적자원과 정책, 6, 행정안전부

<sup>10</sup> 이정하 기자, “수십년 석탄재에 이젠 쓰레기까지...” 영흥도의 한숨, 한겨레, 2021.01.18, 1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79161.html#csidxc5df36e51af57ee8402ff4e23bca9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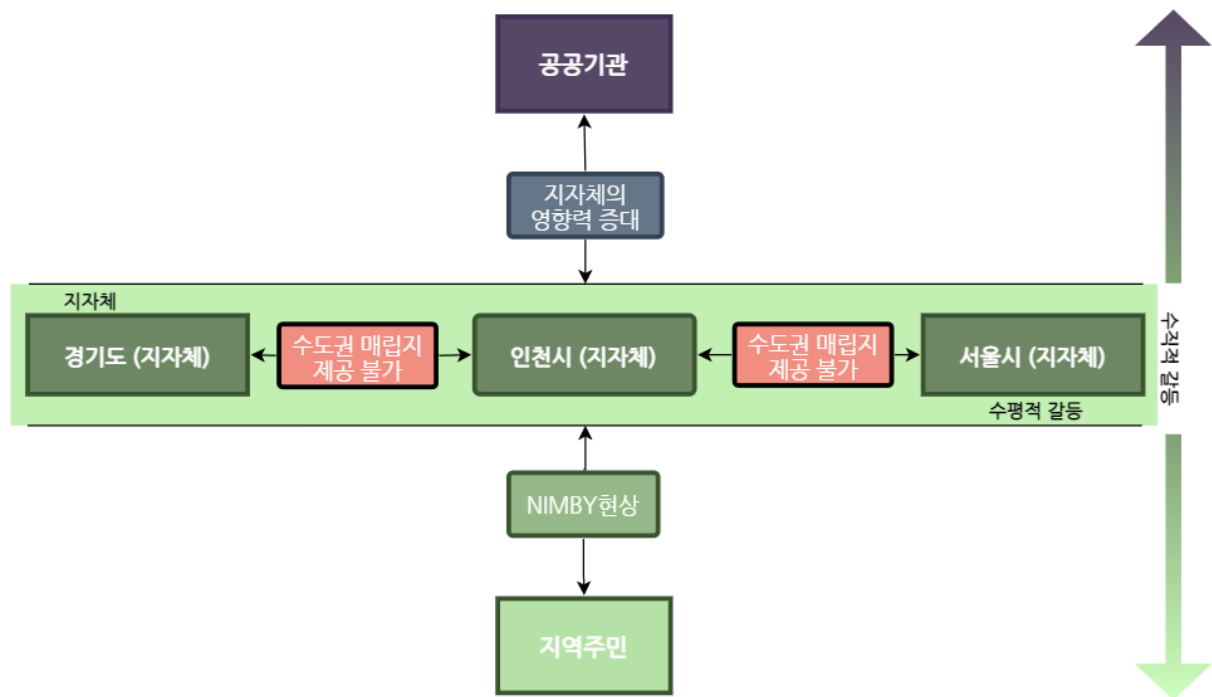
<sup>11</sup> 정석철 기자, 대장동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추진 ... 반발 확산, 경기매일, 2020.11.11, 1 (<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54983> )



### 3. 원인 평가

#### 3.1. 갈등의 구조

본 연구진들이 파악한 수도권 폐기물 처리 갈등의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다.



<폐기물 처리 갈등의 구조 모식도>

폐기물 처리로 촉발된 갈등이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서 공간적으로 확산될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자체와 지역주민, 국회와 지역주민 등 계층적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주민들 각각이 지역개발의 주체인 거버넌스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하면서, 기능적으로 중간에 위치한 지자체가 계층적으로 상하로 갈등을 겪는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후술할 지역개발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와 연관되어, 지자체를 중심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3.2. 갈등의 원인

본 연구진들은 이와 같은 수도권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를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 가. 서울시의 지역내 폐기물 처리 원칙 준수의 어려움

발생지 처리 원칙은 발생한 폐기물과 오염물질을 원인제공자가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환경 정의’로 불린다. 인천시는 이 발생지 처리원칙과 원인자 부담원칙을 근거로 각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각 지자체에서 처리하기를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는 옹진군에 에코랜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자체처리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서울·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90일간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했지만, 응모한 지자체가 없어 무산됐다. 공모 조건은 전체 면적 220만㎡ 이상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이를 만족하는 부지가 서울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입지타당성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전국 폐기물 처리시설 중 압도적인 배출량을 자랑하는 서울시지만 폐기물을 처리할 인프라는 배출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남은 상당량의 폐기물들은 수도권 매립지나 지방의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로 이동하게 된다. 본래 비선호시설은 네트워크화 된 도시체계에서

본래 네트워크화 된 도시체계에서의 비선호시설은 다수의 지역이 서로의 비선호시설을 공유하여 지역에 최소한의 비선호시설을 입지시키고 상호 배려를 통해 시설을 유지한다. 그러나 비선호 시설을 둘 땅이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 내에 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처리 불가의 쓰레기들은 밖으로 보내는 등 발생지 처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 나. 지역개발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

수도권매립지는 1980년대 환경부가 입지 선정을 주도하고 서울시가 대부분의 자본(~70%)을 충당하여 만들어진 곳으로, 인천시가 매립장에 대한 소유권은 가지지만,

재산권은 서울시가 가져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폐기물 매립지 선정에 환경부가 깊게 관여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관련 문제에 환경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지자체의 역할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중앙 정부의 권한이 커 지역 간의 이해관계 갈등이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현재에는 각 지자체의 입장이 중요하게 받아들여 짐에 따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이후로도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류에 의해 수도권 매립지 갈등은 증폭된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차기 수도권 매립지를 찾기 위해 수도권 매립지 입지타당성 조사와 함께 각 지자체의 공모를 받았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가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이는 비선호시설에 대한 혐오로 인한 반발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 개발의 의사결정에서 정부보다 지자체와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지자체들이 쉽사리 공모에 응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보다 님비현상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12</sup>

자신이 사는 지역에 공해 또는 환경오염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 현상은 지방자치제 실현 이후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역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사회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참여의식 증대는 님비현상으로 심화되는 갈등을 더욱 격화시킨다.<sup>13</sup>

#### 다.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신뢰 부족

과거 중앙 집권적인 의사결정 시기에 비선호시설에 대한 입지타당성 조사는 정부주도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주민에 비해 정보, 자본, 조직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주민에게 비협력적인 선택을 하기

---

<sup>12</sup> 님비(NIMBY : Not In My Backyard)현상은 주로 쓰레기 처리장, 원자력 발전소,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등 입지선정의 갈등에서 나타나는 지역이기주의 성격의 사례이다. (임일섭, 2004)

<sup>13</sup> 임일섭, 님비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LG경제연구원, 2004.05.13, 1  
( <http://www.lgeri.com/report/view.do?idx=610> )

쉬웠다.<sup>1415</sup> 정부나 사업운영자가 일방적으로 불투명하게 진행된 입지 선정 계획을 강행하여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촉발하였기 때문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은 현대의 사회 기반 시설의 입지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비선호 기반 시설 안정성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신뢰도 저하도 비선호 시설의 입지 갈등의 심화에 영향을 준다. 지역환경과 지역주민의 건강에 관해 ‘생활쓰레기 대책 관련 서울시민 인식조사’에서 시민들은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 주민 우려 해소 방안으로 ‘인체나 환경 등에 대한 유해성 여부 또는 정도에 대한 검증 결과를 상시 공표할 필요가 있다(32.3%)’고 발표한 것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선호시설에 대한 사업체와 주민들 간의 정보의 불균형은 주민들의 불안함과 공포심을 가중시키고 시설물의 유해성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이는 정부의 정보공개로 지역 주민과 개발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요소로 확인된다.

정부와 지역 주민간의 상호 신뢰가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갈등 관리가 가능하다.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간 상호 신뢰가 형성될 때 각 집단이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게 된다. 비선호시설이 우리 지역에 입지했을 때, 지역주민에게 나타나는 비가시적인 피해나 잠재적인 피해 (인체나 환경유해성 등)의 위험성을 공표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지역의 이해관계가 높은 갈등의 경우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관리하기 보다는 지역 공동체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끌어내고 인정해 줄 때 정부와 주민간 신뢰가 높아진다. 또한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상호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정부가 긴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 라. 폐기물 처리 시설과 관련한 지역 정책 및 법규의 문제점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국가의 기본 계획은 자원순환기본계획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자원순환기본계획이란 자원의 생산, 가공, 소비, 처리까지 자원이 이용되고 처리되는 모든 과정에 대해 순환 경제적인 관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행하자는 내용이다. 즉, 폐기물 처리에 대해 자원순환이라는 관점을 국가적으로 도입하여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sup>14</sup> 나태준. (2005). 공공사업 갈등사례분석을 통한 해결기제의 모색.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sup>15</sup> 임동진. (2011). 공공갈등관리의 실태 및 갈등해결 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45(2): 291-318

나타나는 것이다. 실질적인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어디서 처리하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내용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과 그 시행령에 나타나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폐촉법)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선정 기준과 직접적인 영향권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의 피해보상에 관련된 법률을 안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의 깊게 바라본 법률의 항목은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와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이다. 폐기물 촉진법17조에 따르면 직접 영향권은 인체, 동식물, 임산물 및 수산물에 환경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것이 예상되어 지역 주민을 이주시켜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간접 영향권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또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이내의 지역으로 정의한다. 폐기물 촉진법 9조 에서도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입지로부터 2킬로미터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과반수이상의 자가 그 지역안에 입지선정계획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 입지타당성조사를 그 지역과 환경상 영향이 미치는 인접지역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sup>16</sup>

그러나,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는 비단 환경적인 문제만이 아닌 처리시설 주변의 지가가 떨어지는 등의 경제적 피해도 갈등의 심화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법에서는 영향권에 대한 공간적 정의를 2킬로미터 내로 제한하여 그 밖에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폐촉법에서는 주민 편의 시설의 시설 설치비 지원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주민지원기금 조성규모도 10%에서 20%로 확대하였다.<sup>17</sup> 지역 주민에 대한 상향지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민 수용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지만 영향권 밖의 피해를 받는 모든 주민에 대한 수용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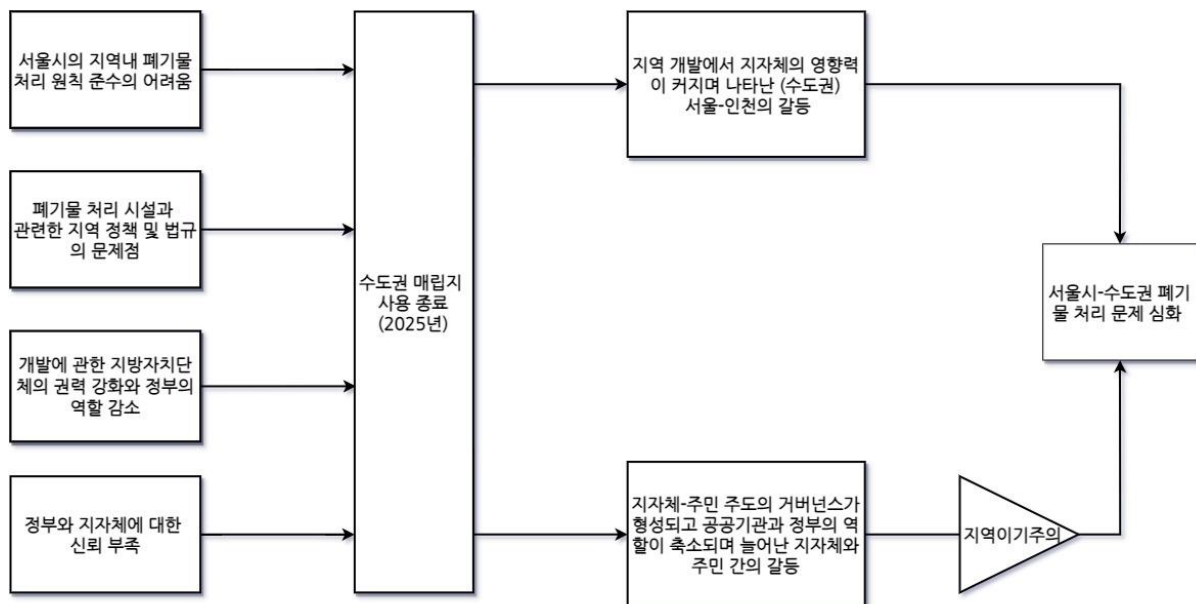
인천시는 수도권 3-1 매립지의 기한이 만료되면 영흥도에 인천시 자체 매립장인 ‘에코랜드’를 세우겠다고 하였다. 영흥도는 6300여명이 사는 작은 섬으로, 주로 해조류, 조개류와 쌀·포도 등을 생산하는 농·어업 종사자가 80%에 이른다. 마을 사람들은 쓰레기

<sup>16</sup> 법제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sup>17</sup> 윤창민 보도국장, 10일 개정된 「폐촉법」, 주민 수용성 확보에 도움될까?, 더청라, 2020.12.15, 1 (<https://www.thecheongna.net/news/articleView.html?idxno=3737>)

매립장이 들어서게 되면 영흥도산 농수산물을 찾지 않게 될까 크게 걱정을 하며 로컬 브랜드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영흥도 주민들의 자산(~부동산)가치 하락도 문제이다. 기사에 따르면, 영흥도 에코랜드 후보지 반경 3km지역은 2020년 11월 매립장 후보지 발표일 이후 토지와 건물의 거래가 없고 매물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영흥도로 들어가는 다리를 건너려면 선재도와 대부도를 잇는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안산시와 시흥시는 폐기물 이송차량으로 인해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과 관광지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sup>18</sup> 영흥도의 사례와 같이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환경적 문제, 혹은 간접적인 경제적 문제에서 더 나아가 지역 브랜드와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하락이 가져오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폐기물 촉진법에서는 부실하게 다뤄지고 있다.

아래는 본 연구진들이 분석한 폐기물 처리시설 갈등의 원인을 기반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 폐기물 처리 문제의 갈등 흐름을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에 의한 갈등 흐름 모식도>

<sup>18</sup> 이정하 기자, “수십년 석탄재에 이젠 쓰레기까지...” 영흥도의 한숨, 한겨레, 2021.01.18, 1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79161.html#csidxc5df36e51af57ee8402ff4e23bca92a>)

이처럼,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로 촉발된 갈등을 도식화하여 보여줌으로써 처리 문제가 심화되는 다양한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주민들까지 아우른 이해당사자들은 갈등의 해결을 통해 사회적 기능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

#### 4. 지역별 해결 사례

본 연구진들은 앞서 수도권 쓰레기 처리 시설의 갈등의 구조와 원인을 정리함에 따라, 이후 서술될 쓰레기 처리 시설 갈등에 관련한 다른 해결 사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4.1. 해외의 대도시 폐기물 문제 해결 사례

###### - 덴마크 코펜하겐 아마게르 바케: 지역친화적 열병합 발전소

2019년 문을 연 덴마크의 아마게르 바케(Amager bakke)는 쓰레기를 태워 에너지를 만드는 열병합 발전소이다. 발전소 옥상 공간을 적어도 20~30%정도 대중에게 개방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최종 설계 디자인은 지붕 일부를 옥상 정원으로 두는 식상한 디자인을 벗어나 발전소 여러 동을 키 순으로 이어 붙여 스키 슬로프를 엮은 것이었다. 구릉지나 산이 없는 덴마크에 직접 산을 짓는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혁신적인 발상이었다. 건물 디자인은 덴마크인들에게 스키 슬로프를 선물해주었고 스키가 값비싼 스포츠라는 인식을 바꿔주었다. 국제경기에 나가는 덴마크 스키 선수의 연습장소로도 사용되었다. 이 외에도 산에서 즐길 수 있는 운동인 스노우 보드, 암벽 등반, 등산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에너지 발전을 하며 배출되는 오염 물질은 각종 필터와 정화 기술을 이용한 최첨단 시설을 구비하여 최소한의 배출량을 이루었다. 이산화황 배출량은 99.5%,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90%가량 줄었다.

비선호시설임에도 건물 디자인을 지형적 특성을 보완하여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문화시설을 제공한 점, 식상한 건물 디자인이 아닌 미끄럼틀 모양의 독특한 형태로 발전소를 관광화 시켜 대중의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한 점, 발전소 운영으로 우려되는 환경 문제를



최첨단 기술로 해결한 점에서 한국의 비선회시설 설계와 운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



<덴마크 코펜하겐 아마게르 바케(좌)와 일본 마이시마 소각장(우)>

#### - 일본의 쓰레기 소각장 (오사카 마이시마 소각장 외)

일본 소각장들은 엄격한 환경기준을 준수하며 주민과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일본의 마이시마 소각장은 설립 당시 지역 주민들의 많은 저항을 받았다. 오사카시는 주민들에게 더럽고 냄새나는 소각장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꿀 것을 약속했고, 실제로 세계적인 환경 건축가인 훈데르트바서에게 소각장 설계를 맡겨 그 약속을 지켰다. 소각장의 겉모습은 마치 놀이시설처럼 보인다. 곡선형의 디자인과 다양한 색상을 사용한 외벽은 건물을 소각장보다 테마파크처럼 보이게 하기에 충분했다. 소각장 내부는 견학 방문객을 위한 체험시설을 준비해 두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하루 평균 900t 정도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거대 쓰레기 처리 시설이지만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벗고 관광객을 불러오는 명소가 될 수 있었다. 요코하마시의 츠루미 소각장은 소각 후의 잔열을 이용한 온수풀, 목욕탕, 온실을 개방하였고 소각장 옆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높은 시설 이용률을 만들었다.

법령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게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정기 분석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 주민 신뢰를 얻는 데 주력하다 보니 소각장 운영에 지장을 주는 민원이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된다. 사람들은 안전성을 검증받은 시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비선회시설의 시설 이용량을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게 되었다.

## 4.2. 국내 폐기물 처리 갈등 해소 사례

### - 하남 유니온 파크

하남 유니온 파크는 국내의 대표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 성공 사례이다. 과거 유니온 파크 부지에는 하수 펌프,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및 음식물 압축 시설이 들어서 있다. 미사지구 아파트단지가 들어옴에 따라 시설 노후화로 인한 민원이 빗발쳤고, 이에 따라 2014년 모든 시설을 지하화 하여 악취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했다. 뿐만 아니라, 지상에 물놀이 시설, 체육시설, 산책로 등의 시민 편의 시설을 집중 배치해 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소각시설에서 연기를 배출하는 굴뚝을 전망 타워로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랜드마크로 인식될 수 있게끔 하였다. 이에 따라 ‘하남이성문화축제’, ‘단오 축제’, ‘어린이날 행사’와 같은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등 하남의 명실상부한 관광 명소로 자리잡았다.

아울러, 시설의 본 목적인 쓰레기 소각 또한 제 역할을 해내고 있다. 하남시의 하루 평균 쓰레기 반입량의 약 절반 가량을 소각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은 ‘0’건이라는 점에서 혐오시설 설치와 운영에서 바람직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국내와 국외를 불문하고 많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유니온 파크를 찾고 있다.



<하남 유니온파크(좌) 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우)>

### -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또 다른 국내의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성공 사례이다. 특히 후술할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진행 과정의 투명성 등 갈등의 해결 측면에 있어서 크게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은평 센터는 130톤/일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처리 시설이 지하에 설치되며, 지상에는 축구장, 족구장 등 일명 ‘생활 SOC복합센터’가 조성되어 주민들의 생활체육과 문화 등 여가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인근 부지에는 빙상장과 인라인롤러경기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어 은평구를 대표하는 스포츠, 문화시설로 활성화할 것이라고 은평구는 밝힌 바 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추진과정에는 끊임없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으며 현재에도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은평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센터의 설계 내용을 은평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설계내용에 대한 의견 또한 온라인으로 피드백을 받고 있다. 또한 건립과정에서,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협업방식의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청장이 직접 부지인 진관동에 방문하여 인근 주민들과 의견을 듣고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노력 끝에 한 때 월 20000만 건에 달하던 반대 민원이 현재에는 500여건 내외로 상당 부분 진정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지난 4월 첫 삽을 떴으며, 오는 2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 5. 결론 및 제언

### 5.1. 결론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종료로 촉발된 갈등은 서울과 인천시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공간적으로, 계층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갈등은 그 자체로 사회기능적 공백을 낳고 갈등으로부터 유발된 사회기능적 공백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갈등을 회피하는 것 역시 문제를 심화시킬 뿐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갈등 해소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버넌스 구성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민들은 과거 중앙 주도 방식으로 인한 폐쇄적 지역개발을 경험하였고, 이에 대해 지자체와 정부 혹은 공공기관에 대대적인 불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NIMBY 혹은 지역 이기주의가 합쳐져 이러한 비선호시설 입지에 있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 나아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지역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려면 주민들의 비선호 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정부-지자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보상과 설득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제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5.2. 제언

이에 본 연구진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 입안 지향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 첫번째로, 지자체 간의 수평적인 갈등을 완화할 제3의 집단이 필요하다

지역개발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상부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권력이 축소되어 과거에 비해 갈등이 쉽게 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각각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는 제3의 집단이 지자체 간의 갈등을 중재 혹은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를 운영한다는 또 다른 관점의 이해관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자체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으므로 적절치 못하다. 그렇다고, 지자체 간의 갈등이 중재되지 못하고 지속되면, 어떤 사회적 기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이는 두 지자체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제3의 집단이 지향해야 할

관점은 두 지자체가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혹은 모두 손해를 최대한 보지 않는 호혜적인 관점이다. 최근 많은 지자체들이 비선호시설 박달을 통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비선호시설들을 각각의 지역에 나누어 경제적인 효율성과 지역 간의 형평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 있는 갈등인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비선호시설을 인천시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모두 떠맡게 되어 발생한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으로 만족하지 않고, 명목적인 형평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러한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반대한다. 즉, 지자체와 주민간의 또 다른 수직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갈등이 해당 시설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가져와 사회기능적 공백을 발생시켜, 또 다른 비선호시설의 입지 필요성과 갈등을 낳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3의 집단의 중재를 통해 앞서 설명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두번째로, 폐기물 처리 시설의 기능적인 개선을 통한 인식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 시설은 가장 대표적인 비선호시설<sup>19</sup>으로 그 필요성에 비해 많은 주민들이 이러한 시설의 입지를 혐오한다. 이는 과거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악취 등의 환경오염과 교통혼잡 등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 때문이다. 따라서, 노후된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이러한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해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생활 체육 시설과 문화 시설의 복합설치를 통해 지역의 관광명소로 개발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회기반시설로 만들어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사례와 같이 대도시 주변이라는 입지 위치의 특성상 주민들에게 부족한 녹지 공간을 제공하려는 시도 또한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시설은 현대 기술의 도입을 통해 앞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제공하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던 부분에 대해 많은 보완이 이루어져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기술의 현대화와 운영 방식의 발전으로 많은 불편과 피해사항이 개선될 수 있음에도, 주민들이 지자체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개선의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

<sup>19</sup> 홍수정 갈등조정담당관, 서울시민, 비선호시설 1위는 ‘쓰레기 매립지’..10개 비선호시설 조사, 서울특별시 행정소식, 2020.07.09, 1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14047>)

부분이 있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폐기물 관리계획을 자원순환계획으로 바꾸고 시설의 이름도 단순히 -소각장, -매립장에서 자원순환센터라는 이름을 붙이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노력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해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수도권에서 가장 최근 갈등이 해결된 은평구의 경우,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반대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 은평자원순환센터에서는 접수된 탄원서와 민원에 대해 모두 하나하나 답변을 하여 공개하였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여차례 소규모 주민설명회를 열고, 대규모 사업설명회 또한 마련하여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였다.<sup>20</sup> 즉, 소통을 통해 주민수용성과 정부와 지자체의 신뢰를 높인 사례로, 주민들의 반대가 오로지 지역이기주의와 NIMBY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에 대한 불신에 기초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갈등의 해소를 위해 경제적인 피해 보상과 물질적 지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증대된 시민의식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어 원활한 운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부천 대장신도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 연결된 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화 문제를 공론화 과정 없이 타 지자체와 논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다. 따라서, 애초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마련된 경제적 보상 재원과 인센티브의 배분 문제로 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 또한 추후 시설 운영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자체 혹은 앞서 언급한 제3 집단의 갈등 중재 또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21</sup>

<sup>20</sup> 박용준 기자, ‘소통의 힘’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순항 중’, 뉴스토마토, 2020.08.23, 1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91541>)

<sup>21</sup> 한국에너지공단,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70호, 2015.02.06

마지막으로, 비선호시설에 대한 다원적인 법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폐기물 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은 비선호시설의 갈등 주체로서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영향권 안에 드는 주민들은 비선호시설의 입지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수도, 정부와 시설 사업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받는데도 법적인 영향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지역 농수산물을 거래해서 살아가는 농어민들은 비선호시설 입지를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 하락을 우려한다.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경관훼손으로 관광지가 가지는 이미지가 실추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역의 산업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은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관리와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주택 정책을 주도하는 중앙정부는 정책의 목표인 서울시 주거난 해소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개발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선호시설의 입지와 운영에 대한 고려를 간과한 채 정책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 폐촉법에 따르면 신도시의 건설에는 지역내 폐기물 처리 원칙에 따라 자체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이 필요한데, 기존에 존재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광역화 하거나, 새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부천 대장신도시나, 창릉신도시의 사례처럼 새로운 갈등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고려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언급된 문제점들을 고려한 법제적 지원의 수정으로 미처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인식과 다원적 이해를 통한 갈등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대중과 지역 주민의 참여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다른 비선호시설의 원활한 갈등 해소 방안의 도출을 기대할 수 있다.



## 6. 참고문헌

### - 신문기사

- 공승배 기자, 환경부 '인천시 종료 선언'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사실상 공식화, 경인일보, 2021.02.02, 1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10201010000179> )
- 김신영 , “쓰레기 소각장 결사반대” 반발 극심, 인천일보, 2020.11.15, 1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6996> )
- 김영빈 기자,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추가 조성 승인, 미디어 인천신문, 2015.09.24, 1  
(<http://www.media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11>)
- 김정만 기자, 수도권대체매립지 공모 실패, 예정됐었다, 에코타임스, 2021.04.15, 1  
(<http://www.ecotig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26> )
- 류인가 기자, 서울시민 82.1% "쓰레기처리장 설치는 필요하지만..." 내 집 앞 설치는 49.9%만 "찬성", 경향신문, 2020.10.07. 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00711190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0071119001) )
- 명지예 기자, "산업폐기물 농촌에 묻으란 말...폐측법 개정 철회해야", 매일경제, 2021.05.20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5/488106/>)
- 박용준 기자, ‘소통의 힘’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순항 중’, 뉴스토마토, 2020.08.23, 1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91541> )
- 박은미 기자, "생태하천 바로 옆, 자원순환센터 건립? 말도 안 돼", 오마이뉴스, 2019.03.02, 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5710](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5710) )
- 박진만, [그때 그 뉴스] 끝나지 않는 '폭탄돌리기'의 역사.. 쓰레기 매립지 갈등, 2020.11.14, 1  
(<https://news.v.daum.net/v/20201114114357245> )
- 윤창 민 보도국장, 10일 개정된 「폐측법」, 주민 수용성 확보에 도움될까?, 더청라, 2020.12.15, 1  
(<https://www.thecheongna.net/news/articleView.html?idxno=3737> )
- 이정하 기자, “수십년 석탄재에 이젠 쓰레기까지...” 영흥도의 한숨, 한겨레, 2021.01.18, 1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79161.html#csidxc5df36e51af57ee8402ff4e23bca92a>)
- 정석철 기자, 대장동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추진 ... 반발 확산, 경기매일, 2020.11.11, 1  
(<http://www.kg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254983> )
- 허남설 기자, 나서는 지자체 하나 없는 수도권매립지...3개월 공모에 신청 ‘0’, 경향신문, 2021.04.14, 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4142102005#csidxea21ae33d64bbc796b6509fae911ede](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4142102005#csidxea21ae33d64bbc796b6509fae911ede) )

홍수정 갈등조정담당관, 서울시민, 비선호시설 1위는 ‘쓰레기 매립지’..10개 비선호시설 조사, 서울특별시 행정소식, 2020.07.09, 1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14047> )

## - 기타 자료

환경부, 생활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될까?, 환경부 블로그, 2018.10.04, 1

(<https://m.blog.naver.com/mesns/221369583055>)

법제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자원순환정보시스템, 2020.12.31,1

(<https://www.recycling->

[info.or.kr/rrs/stat/envStatDetail.do?menuNo=M13020202&pageIndex=1&bbsId=BBSMSTR\\_000000000002&s\\_nttSj=KEC006&nttId=1083&searchBgnDe=&searchEndDe=](https://www.recycling-info.or.kr/rrs/stat/envStatDetail.do?menuNo=M13020202&pageIndex=1&bbsId=BBSMSTR_000000000002&s_nttSj=KEC006&nttId=1083&searchBgnDe=&searchEndDe=))

한국에너지공단,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70호, 2015.02.06

임일섭, 님비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LG경제연구원, 2004.05.13, 1

( <http://www.lgeri.com/report/view.do?idx=610> )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갈등해소 워크샵, 2005

## - 논문

김은미, (2013). 비선호시설 가동률을 둘러싼 갈등에 관한 연구, 공공 인적자원과 정책, 6, 행정안전부  
나태준. (2005). 공공사업 갈등사례분석을 통한 해결기제의 모색.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임동진. (2011). 공공갈등관리의 실태 및 갈등해결 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45(2): 291-318

정원옥, &김숙진. (2016). 수도권매립지 입지갈등의 전개: 네트워크 효과로서의 영역 개념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1(4), 541-558.

주재복, &한부영. (2006). 갈등유형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06, 1.

조경훈, (2015).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갈등의 지속요인 연구 : 퍼지셋 질적 비교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 24권 제 2호